힘 빠진 개헌론…전망도 안갯속

공은 국회로…권력구조 등 쟁점사안 이견

정의장 "국회, 다음달 안까지 단일안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열린 본회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전 10시2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지만, 야당 쪽 의석은 텅 빈 상태였다. 하지만, 정 의장은 예정된 의사 일정, 즉 정부 개헌안의 의결 절차를 밟았다. 정 의장은 개의 선언 직후 개헌안을 상정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을 대신해 개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다만,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때문이었다.

결국, '개헌안 의결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채 진행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을 신청, 텅 빈 본회의장을 바라보며 야당의 출석을 압박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찾지 않았고, 정 의장은 오전 10시51분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한 의원은 모두 114명, 개헌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192명에 한참 못 미쳤다.

이를 보고받은 정 의장은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왜 개헌표결 강행했나=한국당의 본회의 불참과 야3당의 투표 불참은 전날부터 예상됐던 결과다. 따라서 관심은 민주당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도 왜 표결을 강행했다. 이 배경에 대해 야당에서는 '지방선거용'이라는 정략적 의도로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개헌세력 대 호헌세력'의 구도를 만들려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개헌 무산 책임을 굳이 야당에 돌리지 않아도 이미 지방선거에서 우세한 지형을 점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헌법상 의무'라는 명분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야당의 반발을 물리치고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여권이 개헌 논의 전반에 대해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국회는 지난 1년 6개월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갔다. 각 정당별 자체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연대도 구성하는 등 나름의 노력도 했다. 그러나 쟁점 사안,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고 이 안은 폐기됐다.

이제 개헌 논의를 더 할지, 아니면 그만둘지 국회가 선택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어서 동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한동안 개헌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의 개헌 동력이 떨어진 탓이다. 특히 여권에서 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야는 6월까지는 개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도 아직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았다.

정세균 의장은 "개헌 추진의 불씨는 거지지 않았다"며 "6월 내 국회의 개헌 단일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개헌안의 표결에 불참했던 야당들 역시 국회 개헌안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물밑에선 개헌 추진 움직임이 여전하지만 국회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1년6개월 동안 이뤄졌음에도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망이 일반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쉬운 대화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뒤 자리를 나서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공감대

정책 의원총회…당론 채택은 불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대해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으나, 당론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노동계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해 1시간 30분가량 논의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광범위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이날 밤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 고용노동소위에서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에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산입시키는 데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당론 추진을 시도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관련해) 열악한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했고, 상여금이 300% 이상일 때만 예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시행령에서 다듬기로 하고 기본적인 방안을 정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의총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박비를 넣는 문제도 거론됐으나, 상여금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을 토대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 추진 문제도 논의했다. 이 문제 역시 당론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앞으로 표 단속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때 혐의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손혜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28명은 이날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하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공무원 선거법 위반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 조사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한 직원을 조사했다.

이날 선관위 직원들은 광주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7급 상당의 임기제 직원인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수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USB 저장장치, 컴퓨터 본체, 일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다고 밝혔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군수·구의원·도의원 후보

곽영체 "허위·비방 없는 정책선거 정착해야"

곽영체 민주평화당 강진군수 예비후보는 23일 "'동순천 서강진'의 옛 명성이 이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고소고발의 남발로 불명예의 대명사가 된 것은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곽 후보는 "자신과 민주평화당 강진군지역위원회에서는 클린 선거 캠페인으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강진의 남발된 고소고발이 마치 곽영체 후보 진영의 작품인양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후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들은 정책발표회나 공약집을 통한 정책선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면서 "유권자들도 냉정한 판단으로 올바른 후보를 가려내어 순수의 열정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덧붙였다.

박병동 "아내 죽음 날조한 상대후보 법적 대응"

박병동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후보는 24일 "장흥군수 선거가 정책과 공약을 다투는 게 아니라 비방과 비난으로 치닫아 검찰에 고소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후보는 "과거 지병으로 숨을 거둔 아내를 음독자살이라고 날조한 모 후보의 친척인 A씨를 지난 21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소했다"면서 "한 가족의 아픈 과거를 날조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모든 책임은 해당후보에게 있으며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책대안으로 민주적 공명선거를 함께 하자"면서 "군민은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광민 선거사무소 개소…"살기좋은 북구 건설"

마광민 북구의회 구의원 후보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각화사거리(북구 군왕로 227,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한다.

마 후보는 "희망과 열정을 담아 변화와 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북구 주민과 지지자분들을 모시고 함께 하고자 한다"면서 "두암1·2·3동,풍향동, 문화(각화)동, 석곡동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각화)동, 석곡동 주민을 위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구의원을 선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애영 "전남 발전 위해 제1 야당 역할 중요"

권애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24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유한국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현역 도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권 후보는 "상호 견제를 통한 전남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농도전남 발전을 위해 국회 제1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최우선하고, 도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후보는 전남도의회 윤리특위 부위원장, 교육위원장을 맡아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앞장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2017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도와 도교육청 재무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했다.

/박정욱·오광록·장흥=김용기·강진=남철희기자 choul@